

장동혁, '공천 내홍' 대구 찾아 "모두 제 책임... 공정 경선 노력" 사과

張, 지역의원들과 비공개회의 이정현 "조용한 공천 더 위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후보 공천 내홍설'로 내용이 극심한 대구시장 선거 현장을 찾아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데 대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요인·유재욱·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대구시장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회의에서) 들은 많은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구시장 공천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시당원과 후보를 맡겨달라는 대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경선 방식(으로) 공천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면서 "공천위에 전달되고 공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

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정한 공천위원장이 (이들)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뜻이 잘 전달돼 공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항의 중인 후보들을 경선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나 는 물론엔 '경선에 참여한 분들을 지지할 표시'에 분신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 공정할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한 공천위원장은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침묵의 봄', '잠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데 그럴 보폭이라면 우리 요구를 보복이라고 하는 것까 다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왜 시끄럽고, 기록권이 흔들리니까 때문"이라고 한 공천 과정에 반발하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나 더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며 "조용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들리는 소리는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동"이라며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이 변화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또한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틸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공천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조용한 실재보다 시끄러운 허신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게 정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장 공천 내정설은 이정한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중진에 대한 것으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대구시장에 나선 중진 의원들이 최은석 의원이 이진숙 전 부시장위원장 등 특정 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반발하면서다.

이날 간담회는 이를 둘러싼 내용이 이어지자 장 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오는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보수 텃밭'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낙점 유력시

조승래 "지역현안 해결 적극입"... 숲, 금주 결단할 듯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문제로 골상을 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던 김부겸은 주말에 강화되는 대구시당 내부 분위기로 인해 '보수 텃밭'에서 낙점되면서 선거 구도에 대한 지적받은 불거져갈 전망이다.

특히 여론에서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보수 텃밭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대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잘 풀어나갈 책임자"라며 "가부갈 결별 내내 잘 봤다"고 김 총리 출마설에 힘을 실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김부겸 총리가 소용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공천 집중도 낙하

산과 낙하산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국민의힘 기록권이라는 우를 안고 있는 대구시당 내부 분위기는 (지역 총선·총선으로 30년 가까이 최하위권)대구 지역 경제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발전 동력을 위해서도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총리)특히 공화 이진, 공공기관 이진, 대구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잘 풀어나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가 이번 주내로는 (출마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그 맞고, 당inside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4일과 27일 (당)공천관리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공모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경선대 후보도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선거는 전라기 때문에 1%의 예외가 있다면 전략적·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자분을 영입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상황이었던 정무적 판단 아래 공천신청을 추가 접수하고 경선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추가공모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가 금주 총선 주시지 이진과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등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인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 최측근인 정국교 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나 "김 전 총리에게 이제의 당이나 지역의 출마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의견을 갖고 계신다"며 "선거일 60일 전에는 주시지 출마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4월이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과 관련)정확한 시기와 장소,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당 지지도보다 2배 이상 높은 40.3%를 득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4월3일 이전에는 전 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경기 일명에 거주 중인 김 전 총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거주했던 대구 주택을 소유하며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與野 "대전 공장 화재 철저한 수습·진상규명"을 이구동성

與 "피해 최소화 당력 집중" 野 "산업안전시스템 재검증"

최근 대전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관심을 모아 철저히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그간 산업 현장에서 되풀이해 온 안전 관리 부실이나 구조적 결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이가 화재 예방 시스템과 작업장 안전 수칙, 긴급 대응 체계 등 산업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재발방지를 한다"며 "사고 이후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물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겠다"며 "비극의 반복을 줄여야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수습 후 국회에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직 시에 따라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고 있으며 현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신속한 인명 구조와 함께 현장에서 현신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 또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민주당도 정태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의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 위를 가동해 매뉴얼로 이행 중이며 상황발전 및 지원팀을 구성했다"며 "총괄지원팀장에 조승래 사무총장, 현장지원팀장에 박정원 대전지원팀장, 그리고 대전시당이 담당원과 현장봉사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규명 이후 제도 개선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에도 나서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보수 텃밭'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낙점 유력시

조승래 "지역현안 해결 적극입"... 숲, 금주 결단할 듯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문제로 골상을 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던 김부겸은 주말에 강화되는 대구시당 내부 분위기로 인해 '보수 텃밭'에서 낙점되면서 선거 구도에 대한 지적받은 불거져갈 전망이다.

특히 여론에서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보수 텃밭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대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잘 풀어나갈 책임자"라며 "가부갈 결별 내내 잘 봤다"고 김 총리 출마설에 힘을 실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김부겸 총리가 소용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공천 집중도 낙하

산과 낙하산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국민의힘 기록권이라는 우를 안고 있는 대구시당 내부 분위기는 (지역 총선·총선으로 30년 가까이 최하위권)대구 지역 경제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발전 동력을 위해서도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총리)특히 공화 이진, 공공기관 이진, 대구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잘 풀어나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가 이번 주내로는 (출마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그 맞고, 당inside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4일과 27일 (당)공천관리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공모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경선대 후보도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선거는 전라기 때문에 1%의 예외가 있다면 전략적·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자분을 영입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상황이었던 정무적 판단 아래 공천신청을 추가 접수하고 경선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추가공모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가 금주 총선 주시지 이진과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등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인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 최측근인 정국교 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나 "김 전 총리에게 이제의 당이나 지역의 출마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의견을 갖고 계신다"며 "선거일 60일 전에는 주시지 출마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4월이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과 관련)정확한 시기와 장소,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당 지지도보다 2배 이상 높은 40.3%를 득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4월3일 이전에는 전 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경기 일명에 거주 중인 김 전 총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거주했던 대구 주택을 소유하며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23·24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 경선... 후보들 경쟁 치열

합동연설회서 경쟁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23·24일)을 앞두고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는데 힘을 쏟았다.

민지 3선 의원인 박우진 후보 (이하 기선)은 "서울시장은 이 대안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세계를 상대로 서울의 역할을 정립하는 설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초단체장의 행정을 '말죽과 집'에 이관하자, 서울시장의 행정은 '전략과 조정'을 통한 설계"이고 설계자"라면서 구청장 출신의 정영오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기는 선택이 두 개 이상"이라며 "더 민주당다운 후보가 (선거에)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오 후보는 "이제형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차차 손발을 맞출 시장이 누구인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어려웠던 지난 (2022년)지방선거 상동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한강밸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확장성 있고 포용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

지, 당원들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3선 의원인 전현희 후보는 "(저는)민주당 출신 최고의 강남 국회의원"이라며 "강박 기반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며 승리했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소통해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맞장 때 싸워 이긴 국민의 승부사 기질과 국민 권익위원장이신 국가직 위위에 대응해 온 검증된 국정운영 능력으로 서울의 여기를 극복하겠다"라며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환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는 2030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중도 좌경인 선거 출마의 공식이려면 중도는 이제 지역이 아니라 세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 출신의 재선 의원인 김영배 후보는 "저는 행정·국회·자치 활동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삼박자 후보"라며 "이제형 대통령과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할 준비된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처리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는 결코 본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타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전영희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내달 16일까지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 의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선거구 확정 등의 사안을 오는 4월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광역·기초 의원 경선 및 선거구 확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 등이 큰 정치개혁 과제"라며 "4월 16일 본회의를 테드라인으로 해서 빠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월·수·금요일 세 번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태래 대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지역 현장을 찾으며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민착형 공약인 '착용공약(가정)을 개발해 유권자에게 소개하고 '반년지원유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영민 기자 yyy@siminilbo.co.kr

유세단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뿐 아니라 원외 지역구까지 50대 50의 비율로 찾으며 선거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내 설계 지원 재난안전대책위를 통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대전시당에도 현장지원팀을 꾸려 대응하도록 했다.

이영민 기자 yyy@siminilbo.co.kr

“부동산 정책 논의때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 배제하라”

李대통령, 靑·내각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의 과정에서 민주당 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계정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은 다수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민주당자 비거주자가 부패 해악을 초래하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공직자 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공직자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

까지 받은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과 그 안정은 이 정권의 성과가 달린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없으면 살길이 없고 결혼해 아이 낳기기도 할 수가 없다"라며 "빛바림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잃는 달콤한 처량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희 기자 dra@siminilbo.co.kr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법무부가 소송 업무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등동익인 발급이 중단되면서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에 1만 1백여건은 그 해 환수 실적의 2%에 불과했다.

전일과 후순들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고모하고 해 소유권을 분산하는 등 수단을 갈라놓는 자적이 있으나 기존 법령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이번 발의된 친일문제관련 ▲친일 재산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 재산 은닉 시도를 일천 차단하고 ▲위법자의 환

통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등 상설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포섭금 규정을 신설해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성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회공론화 장안과 법무부 장관이 전격 회동한 것과 친일재산 귀속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정책 협력 논의를 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도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여권을 내세운다는